

# 大學教育의 發展課題

金 永 哲  
(KEDI 教育發展研究部長)

大學教育의 결과는 국가·사회발전의 動因으로 작용하는 한편, 국가·사회발전은 대학교육의 발전을 지원·촉진시킨다. 이러한 相補的 關係는 앞으로 도래할 高度産業社會 속에서 더욱 深化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대학에 대한 役割과 期待는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학교육의 발전을 위한 課題의 進단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 I. 序 言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인간의 理想과 欲求를 실현하는 데 있다는 것은 論議의 여지가 없다. 뿐만 아니라 교육이 지니고 있는 手段의 價値를 존중한다면 교육의 또 다른 목적이 국가·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공헌을 해야 한다는 점에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兩側面의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간과해 버릴 수 없는 것이 교육에 주어진 使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은 개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重大한 역할과 機能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역할과 기능의 수행이 수동적인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루어질 때 개개인은 물론 국가·사회의 발전이 加速化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교육은 국가·사회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原動力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이 발전하면 할수록 국가·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의 발전이 加速化되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諸部門에서의 교육과 효율적이며 有機的인 連繫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국가·사회 발전과 교육발전과는 相補的인 關係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교육발전 중에서도 대학교육의 발전은 국가·사회발전을 위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대학교육을 받은 人力이 국가·사회발전의 原動力으로 先導的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학교육의 결과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발전을 위한 中核的인 機能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變貌·發展해 가는 사회속에서 국가·사회발전의 加速化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의 역할과 기능이 한층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더우기 앞으로 다가올 未來社會를 전망해 보면 變化의 樣相이 더욱 激動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激動의 變化에 創

造的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간을 양성·배출해 내는 것이 바로 교육의 역할이자 대학교육의 주된 使命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社會發展이 가속화됨에 따라 대학교육에 대한 期待도 한층 더 증대될 것이고, 이에 따라 대학교육의 역할도 더욱 多樣化되고 急増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사회발전을 유지·존속시키기 위해서 賦存資源과 資本蓄積이 빈약했던 우리나라는 노동인력의 교육수준 향상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크게 의존하여 왔듯이 앞으로도 이러한 傾向은 社會構造의 高度化, 專門化로 말미암아 더욱 심화될 것이다. 환언한다면, 高等專門人力에 대한 需要가 한층 더 증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대학교육의 역할증대에 대한 요구도 한층 더 강조될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교육의 발전을 위한 當面課題부터 종합적으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학교육의 發展課題를 추출해 보고 그 發展方向을 탐색해 보는 것은 미래의 국가·사회발전의 축진은 물론 到來하는 高度産業社會에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한 방편이라고 볼 수 있다.

## II. 大學教育의 發展課題

### 1. 大學機能의 多元化

종래 大學의 理念은 전통적으로 존재하는 지식과 그것을 획득하려는 인류의 욕구를 상호 연결시켜 주는 데 있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의 대학은 教育과 研究가 주된 機能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實用主義 성격을 강조한 美國의 大學에서는 教育 및 研究의 機能遂行 이외에 대학이 국가·사회발전을 위해서 공헌해야 한다는 새로운 使命도 지니게 되었다. 이른바 社會奉仕機能이 부가되기 시작하였다. 社會奉仕機能이란 研究 및 教育機能에 의한 결과를 직접 社會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으로 社會問題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거나 社會的 要請에 의한 專門技術者の 育成活動과 社會參與 활동을 뜻하는 것이다.

실제로 현대의 高度産業社會에서는 이상과 같은 대학의 3大 機能 중에서도 社會奉仕機能이 점차 더 강조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종래의 대학은 유일한 理念 또는 目的을 지닌 一元的 制度로서 그 내부에는 統一性和 一貫性을 지닌 人爲的 共同體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을 지닌 대학은 急激하고 多樣하게 변모·발전해 가는 현대사회에서 정체되고, 폐쇄적이며 편협해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현대의 대학은 점차 多元的인 성격을 지닌 대학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대의 대학은 학문위주의 상아탑의 孤高主義를 탈피할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오히려 국가·사회발전을 위한 動因으로서의 역할이 크게 요청되고 있다. 독일의 哲學者 K. Jaspers는 社會는 法的·物質的으로 대학을 지원하여 대학이 사회 전체의 이익에 副應하는 근본적인 연구를 수행토록 하며, 知的 風土를 제공하는 역할을 다하도록 하여 계속적으로 국가·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학과 사회의 긴밀한 관계를 지적하였듯이 국가·사회의 발전을 위한 대학의 社會奉仕機能이 한층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 2. 學校制度的 補充

종래의 대학은 주로 就學 適齡期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앞으로 經濟·社會體制가 高度産業社會로 移行됨에 따라 知識·情報量의 급격한 팽창은 쉽게 예상되기 때문에 限定된 學校教育단으로는 未來社會에의 적응이 매우 어렵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落後된 지식과 기술을 更新하고 産業社會에서 발생하기 쉬운 價值觀의 혼란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학교교육 이후에도 社會教育과 繼續教育을 강화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즉, 平生教育體制的 構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放送通信大學의 확충과 開放大學의 設置는 平生教育體制를 지향하는 大學教育政策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平生教育體制의 시계적 요청에 따라 大學教育도 기존 學校制度的 維持·存續 이외에 就業者를 위한 現職研修와 일반 시민을 위한 繼續教育機

을 다양하게 제공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 3. 入試制度와 定員政策의 補充

學生選拔(selection)은 학교교육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로, 修學 適格者로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制度的 裝置인 大學入學試驗制度는 해방 이후 社會問題의 하나로서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우리 나라의 대학 입시제도는 數次에 걸쳐 修正·變更되어 왔으나 現行 제도는 1981學年度부터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大學本 考査를 폐지하고 그 대신에 高校內 申成績과 大學入學學力考査成績에 의해 학생을 선발토록 하고 있다. 대학입학 시험제도에서 高校內 申成績을 확대해서 반영한 것은 高校教育의 正常化를 지원·촉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地域間 教育 隔差를 완화시키고 敎權을 信賴·回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그러나 대학 입시제도를 개편하여 실시한 1981년 이래 일부 대학에서는 銜衡過程에서 소위 「눈치작전」과 이에 따른 일부 대학의 定員未達이라는 不作用도 낳고 있다. 따라서 현존의 대학 입시제도에서도 입시제도가 지니고 있는 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하며, 아울러 社會的 逆機能을 해소시킬 수 있는 制度的인 補充策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 나라의 현행 大學 定員政策은 1970년대의 大學定員 凍結政策에서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대학정원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엘리뜨 중심의 대학정책을 탈피하여 平等主義(egalitarian)의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우리 나라 고등교육의 취학률은 適齡人口 對比 25%線を 넘고 있어서 이미 영국, 프랑스, 서독 등의 西歐 先進國의 就學率 水準에 도달하고 있다. 그러므로 高等專門人力의 需要와 有機的으로 連繫되며, 高等教育投資의 效率性을 提高시키며, 아울러 최근 급격히 증가된 學生需要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高等教育人口의 適正規模에 관한 長期計劃의 수립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시행되고 있는 卒業定員制의 운영에서도 一定比率의 入學人員 결정과 脫落比

率의 적용 등은, 획일화를 止揚하고 대학실정에 따라 靈通性을 부여하고 運營의 妙를 기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점차 개선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 4. 教育課程 運營의 內實化

대학의 教育課程은 卒業所要學點을 非實驗大學 160學點과 實驗大學 140學點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二元體制로 유지·운영되고 있으며, 敎科는 敎養, 專攻, 選擇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들 敎科의 構成 및 比重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敎養 敎科에 한하여 전체 과정의 30% 이상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의 실제 敎科運營은 대학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은 敎養敎科目으로 50~55 學點을 개설하고 있고, 專攻科目 중 必須敎科와 選擇敎科의 비율은 40:60 정도이다. 그러나 特性化 大學이나 專門大學에 있어서는 專攻 敎科에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敎養敎育이 소홀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대학에서는 敎授와 施設 등의 부족으로 教育課程 운영에 비효율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教育課程의 編成에 있어서도 教育內容의 중복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발달하고 있는 學問의 추세, 지식의 변화 등을 유효 적절하게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敎育내용의 時代·社會的인 適合性의 결여로 인하여 대학교육의 秀越性의 향상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

### 5. 敎授研究의 活性化

敎育과 研究는 대학의 전통적인 기능으로 대학발전과 직결될 수 있는 關鍵이 된다. 그러나 최근 급격히 증가된 대학생수에 대응할 만한 충분한 敎授要員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敎育과정은 大單位 수업으로 운영되고 있고 敎授 對 學生 比率도 계속 약화되면서 敎授의 講義負擔과 學生指導 등의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敎수들의 研究활동에도

커다란 장해요소로 대두되고 있으며, 대학의 교육효과까지 크게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대학의 교수 및 연구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教授들의 강의부담이 法定基準을 초과하지 않도록 教授要員이 확보되어야 하며, 부족 교수요원의 양성을 위해서는 大學院 교육을 內實化하면서 확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大學研究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大學內의 研究所를 중점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 연구소의 육성을 위해 정부의 研究·開發에 대한 투자를 강화시키고, 産學連繫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 6. 施設 擴充 및 活用度 提高

우리 나라의 高等教育人口는 해방 당시 7,800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1983년에는 100만명 이상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을 정도로 크게 증가되었다. 이러한 교육인구의 팽창은 국민의 높은 教育熱과 국가의 教育機會 擴大政策의 相乘作用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인구의 확대는 이를 수용하기 위한 시설의 확충을 불가피하게 하여 왔으나, 學校敷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시설의 新·增築의 제약 등으로 대학시설은 절대수준에 크게 부족한 실정에 있다. 더우기 앞으로 고등교육인구의 계속적인 증가를 전망할 때, 시설부족 현상은 계속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이와 같은 시설은 교수요원이 충족되지 못한 상황하에서는 더욱 그 확보의 중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교수요원이 충족되고 높은 資質을 구비하였다고 가정하면 시설이 다소 부족하다 할지라도 교육의 秀越性을 추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시설의 絕對量 확보 및 그 質的 水準의 유지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한편, 시설의 절대량의 확보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설의 活用性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1981년부터 施設活用率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全日授業制의 실시를 권장하여 왔으나, 대부분의 대학이 시설의 절대량이 크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講義爲主의 강좌만 개설하고 있어서 講座規模의

大型化는 물론 學事運營에도 무리를 빚고 있다.

따라서 대학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교육여건을 快適하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집중적인 財政支援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도 全日授業制 등의 도입으로 施設活用率을 높이기 위한 제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 7. 大學行政의 自律性 提高

大學行政은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까지의 開放的이고 自由放任的인 정책에서 1960년대 이후 국가의 干渉와 統制가 크게 늘어나게 됨에 따라 대학의 自律性이 크게 위축되었다. 특히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定員政策에서 卒業定員制가 실시되고, 入學制度에서도 大學本考査를 폐지하고 國家管理의 大學入學 學力考査와 高校內 申成績에 의한 학생을 선발하게 됨에 따라, 學生選拔에서부터 卒業에 이르기까지의 學事運營全般에 걸쳐 대학의 自律的 選擇權이 크게 상실되어 버렸다.

그러나 대학이 高度의 知識과 學問의 결정체라는 사실과 대학의 傳統과 特性을 더욱 신장·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대학의 自律性은 앞으로 더욱 伸張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大學內에서도 大學自體의 정책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自律力量을 기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특히 大學內의 官僚制的 要素를 제거함은 물론 대학 자체의 政策 審議·決定機構를 활성화하고, 行政管理의 專門化를 위해 職能分化를 촉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8. 私學 財政支援 強化

정상적인 교육발전을 加速化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安定 教育財源이 확보되어야 한다. 教育의 秀越性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생 1인당 교육비를 安定的으로 保障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의 결과에서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외국의 수준에 비하여 零細性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教育財政의 脆弱은 私立大學일수록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 나라 고등교육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학의 財政壓迫의 加重을 완화시키지 않고는 전체 고등교육의 정상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우리 나라의 大學財政은 국·공립대학의 경우 財源의 대부분을 國庫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에 私立大學은 財源의 대부분을 학생의 公納金에 의존하고 있어서 財源의 偏重이 너무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간에 학생의 교육비 부담이 衡平의 原則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립대학의 경우 학생들이 부담하는 교육비 수준이 이미 限界點에 도달해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이 加重되고 있다.

따라서 고등교육은 受益者 負擔原則을 지향한다 할지라도 최종적인 수익은 국가로 歸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私學에 대해서도 정부의 財政支援이 확대·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私立大學의 施設擴充을 위한 長期低利의 融資制度와 같은 措置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립대학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私學育成法을 제정하여 財源確保와 助成의 基準 등을 制度化시킬 필요성도 크게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사립대학 자체에서도 學校法人으로부터의 教育費 轉入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財政運營의 合理化를 통하여 浪費要因을 과감히 제거하고 經費의 支出效果를 最大化시킬 수 있는 노력이 先行되어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課題 이외에도 대학교육이 정상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優秀教授要員의 養成·

確保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教授要員은 絕對數가 부족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教授要員의 專門的 資質을 계속 향상시킬 수 있는 配慮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大學教育의 秀越性 向上이 결국 교수의 지도 역량에 의존한다고 볼 때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교수요원을 양성·공급할 수 있는 방안의 수립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Ⅲ. 結 言

大學教育이 당면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 대두하게 될 課題를 탐색·제시해 보는 것은 到來하는 高度産業社會에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高度産業社會 속에서의 대학교육의 역할은 한층 더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豫見되기 때문에 대학교육의 발전을 위한 과제를 탐색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는 밝은 미래를 약속할 수 없다.

따라서 急變하는 사회 속에서 대학이 국가·사회발전을 위해 새로운 期待에 부응하면서 先導的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傾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대학교육의 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行·財政 支援을 극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